

#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사회·경제적 변화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A Glance  
Through the Korea Welfare Panel Data*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주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이중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안정적 소득확보가 불안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역시 함께 증가하였다. 이에 한국복지패널을 통해 9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거,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주거측면에서는 월세거주자일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빈곤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측면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한 번 시작된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시기 많은 복지정책을 확대 시행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혹은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복지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가 10년을 지나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회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급속하게 변화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경제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이중 노동시장체제가 고착화되어 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변화로 인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통계청은 물론 여러 기관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조사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자료가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당해연도 조사자료(=횡단면 조사)가 대

부분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시간변화에 따른 사회변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패널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다양한 패널조사가 만들어졌다. 지난 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모습은 급하게 변화해 왔으며, 이들 변화된 모습을 잘 반영하고 변화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패널이 지닌 장점이다. 이미 여러 기관에서 관련 패널들(고령화패널, 노동패널, 청소년패널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다른 패널들이 특정 대상과 연령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이하 복지패널)는 전국민 및 가구에 대한 대표성

을 기초로 소득, 지출 및 자산은 물론이고,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사회변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는 패널이다. 복지패널은 2006년부터 처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10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패널 조사가 진행된 이후 현재 9차조사(2014년)까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어 조사 시작 이후 9년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지난 시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복지패널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본 고에 한계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주거,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변화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전월세 금액 상승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주거빈곤 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sup>1)</sup>. 특히 이종노동시장 구조속에서 안정적 소득확보가 불안한 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변

화가 지난 시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0년대 들어 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가족구조가 변하면서 국민들의 가족부양 및 복지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복지요구와 체감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패널을 통해 그동안의 변화를 보고 그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한국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사회경제적 변화

### 1) 주거측면

복지패널을 통해 지난 9년간(2005~2013년) 주거 점유형태 변화를 보면 자가의 경우 57.8%에서 2013년에는 60.1%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전세는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 2011년

표 1.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연도별 점유형태 변화

(단위: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자가	57.8	58.5	58.0	58.9	58.6	59.5	59.4	59.1	60.1
전세	18.9	18.8	18.8	19.6	20.5	20.2	19.3	18.5	17.0
월세 <sup>1)</sup>	15.6	15.9	16.5	14.7	14.9	14.6	15.7	16.4	16.6
기타	7.7	6.9	6.8	6.8	6.0	5.7	5.6	6.0	6.3

주: 1) 월세는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를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1) 국토해양부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부담 비율은 2006년 22.9%, 2008년 22.8%, 2010년 23.1%, 2012년 2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2012년 소득의 33.6%를 주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진미윤(2013). 최근 주거빈곤의 양상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보건복지포럼 3월호, pp.46)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는 17.0%로 2005년 18.9%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는 2005년 15.6%에서 2013년 16.6%로 역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유럽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한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최근 전세보다 월세로 주거 점유형태가 변화하는 모습이 복지패널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복지패널이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주거빈곤에 대한 동태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sup>2)</sup>. <표 2>에서 보듯이 지난 9년간 주거빈곤을 장기간 경험한 빈

곤층은 7.0%, 단기 주거빈곤층은 7.6%, 일시적 주거빈곤층은 13.4%로 나타나, 전체 계층의 28.0%가 최소한 한 번 이상 주거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sup>.

동 비중은 월세 거주자의 경우 더욱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월세거주자를 별도로 볼 경우 장기 주거빈곤층은 24.9%, 단기 20.1%, 일시적 주거빈곤층은 15.9%로 월세거주자 2명중 한명 이상은 주거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새로운 주거점유형태로 반전세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점유형태의 변화가 월세 거주자들

표 2.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주거빈곤 동태변화<sup>4)</sup>

(단위: %)

전체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7.0	7.6	13.4	72.0
면적	2.7	3.1	3.9	90.4
RIR 20%	1.6	3.8	10.7	83.9
환경	3.2	2.6	3.4	90.8
월세거주자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24.9	20.1	15.9	39.1
면적	8.9	9.8	12.3	69.0
RIR 20%	8.7	11.9	15.0	64.4
환경	9.6	7.5	5.8	77.1

주: 월세는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를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 2) 주거빈곤은 두가지 기준을 활용하였다. 먼저 국토부에서 발표한 최저주거기준으로 여기는 면적, 환경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수별 면적기준과 환경기준을 적용하였다. 면적은 실제 조사된 가구원수별 주거면적을, 환경기준은 지상주택을 제외한 지하, 반지하, 옥탑방거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두 번째는 월소득 대비 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로서 월(가처분)소득에서 주거관련비(월세액, 관리비 등)의 비중이 20% 혹은 30%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층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RIR이 20% 이상인 대상을 주거빈곤층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김혜승(2004), 「주거비지불능력 개념에 기초한 주거비보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연도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5년 268만가구(16.5%), 2010년 184만 가구(10.6%), 2012년 127.7만가구(7.2%)로 조사되었다(진미운(2013), pp.44).
- 4) 주거빈곤의 동태적 변화는 복지패널을 균형패널로 만든후 9년의 시점중 주거빈곤을 4년(4회 이상) 이상 경험한 경우를 장기빈곤, 2~3년(2~3회)은 단기빈곤, 1년(1회)은 일시 빈곤으로 구분하였다.

표 3. 주거빈곤을 동태변화: 성별 구분

(단위: %)

전체	여성				남성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7.3	7.9	13.8	71.1	6.6	7.3	13.0	73.0
면적	2.5	3.1	4.1	90.3	2.8	3.2	3.6	90.4
RIR 20%	1.7	4.2	11.2	82.9	1.5	3.3	10.2	84.9
환경	3.5	2.9	3.2	90.4	2.9	2.3	3.6	91.2
월세거주자	여성				남성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26.1	19.5	17.0	37.4	23.6	20.8	14.7	40.9
면적	8.7	9.9	12.3	69.0	9.1	9.6	12.2	69.1
RIR 20%	9.0	13.5	15.5	62.0	8.4	10.1	14.4	67.0
환경	10.3	8.1	5.1	76.6	8.9	6.8	6.6	77.7

주: 월세는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를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주거빈곤에 대한 변화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의 주거환경이 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장기 및 일시빈곤을 경험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다소 높았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여성이 좀 더 열악한 주거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월세 거주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여성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성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령별 분포를 통해 주거빈곤 변화를 보면 34세 이하 청년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주거빈곤율이 다소 높았다. 장기 및 단기에서는 34세 이하,

35~55세의 중년층의 주거빈곤율이 높았다. 세부적 내용에서는 동 연령층은 주거면적,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활동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나타내는 RIR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세거주자의 경우 전체 계층에 비해 매우 열악한 주거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한 번이라도 주거빈곤을 경험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고령세대는 소득대비 주거비(RIR)가 20% 이상을 장기간 경험하는 비중이 28.2%, 단기 25.1%, 일시주거빈곤 17.2%로 노인 세명중 두명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

5) 주거실태조사에서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중 월세 비중(보증부월세 및 월세가구)이 44.1%(2010년)에서 2012년에는 47.1%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51.1%(2012년)로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었다. 연령에서도 65세 이상 고령층이 41.5%로 가장 높은 비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진미윤(2013), pp45).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6)</sup>.

## 2) 노동시장 변화

여기에서는 복지패널 1차년도(2005년)에서 9차

년도(2013년)까지의 9년간 자료로 노동시장의 주요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분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기업규모별로 지난 시기 임금이 어떻게 차이를 두고 변화해 왔는지, 상용직과 불안정 고용(임시·일용직 등)간의 변화, 청년실업 증가와 관

표 4. 주거빈곤율 동태변화: 연령별 구분

(단위: %)

전체	34세 이하				35~55세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7.1	8.0	13.6	71.4	7.0	6.9	12.1	73.9
면적	3.2	3.8	4.5	88.5	2.8	3.1	3.9	90.2
RIR 20%	1.2	3.4	10.0	85.4	1.4	3.3	9.4	85.9
환경	3.3	2.9	3.8	90.0	3.2	2.5	3.1	91.3
전체	56~64세				65세 이상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6.7	6.7	14.7	71.9	6.3	9.9	16.9	66.8
면적	1.0	1.6	2.4	95.0	1.1	1.7	2.2	94.9
RIR 20%	2.8	4.7	13.9	78.6	3.1	6.8	16.4	73.7
환경	3.3	2.4	3.1	91.3	3.0	2.6	3.0	91.5

월세거주자	34세 이하				35~55세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22.8	20.1	16.3	40.9	24.1	19.5	15.7	40.7
면적	9.3	11.4	12.6	66.7	9.5	8.8	12.5	69.1
RIR 20%	5.5	10.1	15.3	69.0	7.7	11.8	13.9	66.6
환경	9.4	7.9	6.1	76.7	8.7	6.9	5.1	79.3
월세거주자	56~64세				65세 이상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장기	단기	일시	비빈곤
주거빈곤	35.8	17.0	14.9	32.3	36.5	28.3	15.4	19.8
면적	4.8	6.1	10.8	78.3	5.5	7.1	9.6	77.9
RIR 20%	22.0	14.4	17.3	46.3	28.2	25.1	17.2	29.6
환경	15.8	9.0	6.9	68.4	11.3	6.3	7.3	75.1

주: 월세는 보증부 월세와 사글세를 포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6) 노인실태조사(2014)를 통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지출비교에서 부담스러운 지출로 주거관련비(35.4%), 보건의료비(23.1%), 식비(16.2%)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정경희 외(2014),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294).

련한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기업규모별 임금수준의 변화 양상은 사업장규모를 10명 미만, 100명 미만, 500명 미만,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의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평균은 2,118만원으로 2005년 1,917만원 대비 7.4% 상승하였다. 또한 10~99명 사업장과 100~499명 사업장의 임금수준은 각각 2005년 2,303만원, 2,706만원에서 2013년 2,826만원, 3,367만원으로 22.7%, 24.4% 상승하였다. 반면 500명 이상 기업의 임금평균은 500~999명 기업의 경우 42.3%, 1000명 이상 기업의 경우 41.1% 상승하여, 소규모 기업의 평균임금 상승비율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은 기업 규모간 임금격차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등 중견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의 임금수준이 조금씩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우리나라의 기업 경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소폭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9년 동안 2,000만원 이내로 같은 수준을 유지되고 있어 가장 취약한 대상을 알 수 있다<sup>8)</sup>.

규모가 큰 기업으로의 이동을 통해 임금 및 생활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 개인별 기업규모의 이동변화를 살펴보았다. 연도간 비교는 2005년, 2009년, 2013년의 3개 시점에서 종사한 기업규모 변화를 살펴보았

표 5.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기업규모별 임금수준

(단위: 만원/년)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5년 대비 2013년
10명 미만	1,971	1,984	1,970	2,016	2,170	1,465	1,991	2,071	2,118	7.4% ↑
10~99명	2,303	2,303	2,395	2,305	2,366	2,465	2,435	2,580	2,826	22.7% ↑
100~499명	2,706	2,806	2,831	3,150	3,056	2,943	2,931	3,134	3,367	24.4% ↑
500~999명	3,445	3,393	3,607	3,499	3,448	4,159	4,136	3,570	4,904	42.3% ↑
1000명 이상	3,823	3,945	4,147	4,286	4,219	4,386	4,717	4,886	5,396	41.1%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7) 이인재 외(2009)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기업규모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기업규모는 고용형태보다 임금수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 따라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주목하기보다는 저임금 근로자라는 실질적 기준에의 문제에 접근해야한다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이인재 외(20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32(3)(2009, 12), pp.23-24.)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분석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임금격차가 다소 확대되었다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른 임금격차가 두드러진 이중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임금수준은 대규모 사업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복순(2015),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월간노동리뷰** 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49-50)

표 6.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기업규모 이동비율

(단위: %)

2009년(5차) 2005년(1차)	10명 미만	10~99명	1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10명미만	39.8	8.3	1.4	0.2	1.6
10~99명	6.4	10.8	2.3	0.3	4.7
100~499명	1.8	2.6	2.7	0.3	2.3
500~999명	0.2	0.3	0.2	0.3	1.0
1,000명이상	1.6	1.4	1.6	0.4	7.7
2013년(9차) 2009년(5차)	10명 미만	10~99명	1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10명미만	38.2	8.4	1.7	0.5	0.9
10~99명	7.6	10.3	2.9	0.6	1.9
100~499명	1.4	2.2	3.2	0.5	1.1
500~999명	0.4	0.3	0.3	0.2	0.4
1,000명이상	2.1	2.5	1.1	1.0	10.4
2013년(9차) 2005년(1차)	10명 미만	10~99명	100~499명	500~999명	1,000명 이상
10명미만	37.0	9.7	2.0	0.6	0.6
10~99명	8.6	9.1	2.4	0.6	4.4
100~499명	2.3	2.4	2.6	0.4	1.8
500~999명	0.4	0.3	0.3	0.4	0.9
1,000명이상	1.9	2.3	0.9	0.9	7.2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다<sup>9)</sup>. 그 결과 2005년에서 2009년에 동일한 기업 규모에 머무른 경우는 61.3%, 2009년에서 2013년 62.3%로 비슷하게 유지되었으며, 2005년에서 2013년 9년 동안 동일한 기업규모에 머무른 경우는 56.3%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약 40%가 동일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나은 임금수준으로 상황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보다 큰 규모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는 2005년에서 2009년은 22.4%, 2009년에서

2013년은 18.9%였으며, 반대로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이동한 경우는 각각 16.5%, 18.9%로 상대적으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의 경제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005년 대비 2013년의 기업규모 이동비율을 살펴보면, 동일한 기업규모에 머무른 경우가 56.3%,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옮겨간 비율 20.3%,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옮겨간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다음에서는 종사상의 지위 상태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의 분석과 동일한 3개 시점(2005년,

9) 3개년도의 설정은 2005년은 패널조사가 시작한 시점이며, 2009년은 분석가능한 9개년도의 중간연도, 2013년은 9차 패널의 마지막 연도라는 점에서 비교를 위해 3개년도를 설정하였다.

표 7.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종사상지위 이동비율

(단위: %)

2009년(5차) 2005년(1차)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31.9	5.3	2.9	0.6
임시,일용,자활,공공	9.1	14.4	3.6	0.8
자영자,무급가족	2.0	3.3	20.5	0.1
실업자	1.8	2.8	0.7	0.5
2013년(9차) 2009년(5차)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32.3	6.9	2.7	0.8
임시,일용,자활,공공	7.2	18.4	3.4	1.1
자영자,무급가족	2.0	2.8	19.7	0.2
실업자	1.1	0.8	0.2	0.4
2013년(9차) 2005년(1차)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29.3	6.5	4.4	0.8
임시,일용,자활,공공	8.5	14.3	4.8	0.5
자영자,무급가족	2.5	4.1	17.5	0.1
실업자	1.9	2.9	1.1	0.7

2009년(5차) 2005년(1차)	여성				남성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20.9	7.2	2.3	0.7	38.6	4.1	3.2	0.5
임시,일용,자활,공공	11.0	18.3	3.8	0.9	7.9	12.0	3.5	0.7
자영자,무급가족	1.7	4.3	21.4	0.1	2.2	2.6	19.9	0.1
실업자	1.8	4.4	0.8	0.5	1.8	1.8	0.6	0.5
2013년(9차) 2005년(5차)	여성				남성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20.0	8.4	2.2	0.9	40.1	5.9	3.0	0.6
임시,일용,자활,공공	9.2	26.6	4.5	1.2	6.0	13.2	2.7	1.0
자영자,무급가족	1.0	3.4	20.0	0.0	2.7	2.4	19.5	0.3
실업자	1.3	0.8	0.2	0.2	1.0	0.8	0.3	0.4
2013년(9차) 2005년(1차)	여성				남성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임시,일용,자활,공공	자영자,무급가족	실업자
상용	17.3	7.9	3.5	0.7	35.9	5.7	5.0	0.9
임시,일용,자활,공공	8.2	21.7	5.2	0.7	8.7	10.3	4.6	0.4
자영자,무급가족	1.9	5.4	18.8	0.0	2.9	3.4	16.8	0.2
실업자	2.0	4.9	1.7	0.3	1.8	1.8	0.7	0.9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2009년, 2013년)의 변화를 비교하였으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근로자,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 근로자, 자영자(고용주·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시점별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동일한 종사상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가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67.2%,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70.8%, 2005년 대비 2013년에는 61.8%로 나타났으며, 상용직에 그대로 머문 경우는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31.9%,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32.3%,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29.3%로, 대체적으로 30% 정도는 상용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고용으로 볼 수 있는 임시·일용 등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도 2005년에서 2013년 14.3%로 나타나, 한 번 불안정 고용상태를 맞이하면 열명 중 한 명 이상은 동 상태가 장기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지위로의 상향이동을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2005년 상용직 근로자에서 2009년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근로자 및 실업자로 이동하였거나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근로자에서 실업자로, 자영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은 6.8%로 나타났으며,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9.0%, 전체적으로 2005년에서 가장 최근인 2013년 사이에는 7.9%가 그 전 시점의 종사상 지위보다 낮은 상태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근로자 및 실업자에서 상용직 근로자로 이동한 경우는 10.9%, 2009년과 2013년 사이에는 8.3%로 나타났으며, 1차년도보다 9차년도에 더 나은 종사상의 지위로 변화한 경우는 10.4% 정도로 나타났다.

시점별 종사상 지위변화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남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35~40% 정도의 비율이 상용직에 머물러 있는 반면, 여성이 상용직에 머물러 있는 비율은 20.0%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임시·일용 및 자활·

표 8. 복지패널을 통해서 본 비경제활동사유 변화

(단위: %)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근로무능력		17.5	10.9	5.1	3.2	3.8	2.6	2.4	2.9	3.9
군복무		0.4	1.3	1.5	1.2	0.6	1.3	1.4	1.1	1.2
학업	정규교육기관 학업, 진학준비	22.8	30.7	30.1	28.7	27.6	27.6	26.7	26.6	28.9
	취업준비					5.7	5.4	5.8	5.4	4.5
가사, 양육, 간병		41.0	33.2	34.0	33.7	34.1	30.8	29.2	27.7	29.8
구직활동포기		3.4	5.0	5.4	6.7	4.6	5.3	5.4	4.0	4.0
근로의사 없음		10.6	15.7	20.7	24.1	22.3	25.9	28.4	31.7	26.5
기타		4.3	3.2	3.2	2.4	1.3	1.2	0.7	0.7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공공근로자에 머무르는 비율은 남성은 10% 전후로 나타나는데 반해 여성은 상용직에 머무르는 비율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18.3%,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26.6%로 2005년 대비 2013년에는 21.7%가 임시·일용직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안정 고용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2005년 상용직 근로자에서 2009년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근로자 및 실업자로 이동하였거나 임시·일용 및 자활, 공공근로자에서 실업자로, 자영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5.4%인 반면에 여성은 8.9%,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남성 7.8%, 여성 10.5%로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가 남성보다 열세에 있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질문인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도별 비율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비경제활동 사유 중 '근로이사 없음'의 비율이 2005년도에 10.6%에서 점점 증가하여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26.5%로 그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구직활동을 포기하였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05년 3.4%에서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긴 하였으나, 최근 2013년에는 4.0%의 비율로 연도별로 구직활동포기자의 비율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표 8> 바탕으로 구직활동 포기자와 근로의

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각 사유별로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연도별 구직활동포기자 중 2005년 비율이 가장 높았던 65세 이상의 연령대와 56~64세 연령대가 2013년에 10%p 정도 현저하게 줄어든 반면, 20~34세 연령대의 비율이 2005년 12.1%에서 2007년 3.4%로 크게 줄었으나, 2012년의 경우 20.0%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청년의 비율이 구직활동포기자 중 매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sup>10)</sup>. 35~55세 중장년 연령대 또한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구직활동포기자의 비율이 2005년 12.7%에서 2013년 31.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비경제활동의 사유로 근로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20~34세의 비율은 2005년 5.4%에서 2006년 10.2%로 가장 높게,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8.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취업준비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20대 후반으로 이들의 비경제활동 사유변화를 살펴보았다. 2009년 취업준비 중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2010년 비경제활동사유는 동일한 사유인 취업준비가 33.6%, 다음으로 근로이사 없음이 23.7%, 정규교육기관학업 및 진학준비의 이유가 17.5%로 나타났으며,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의 변화로는 동일한 취업준비의 사유가 70.0%, 다음으로 정규교육기관학업 및 진학준비가 14.4%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2년 사

10)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란 일을 하지도 않고 일할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을 말하며, 이러한 니트는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 니트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15~34세 인구와 비구직 니트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청년 비구직 니트는 이와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재량 외(2013), 우리나라 청년 니트(NEET)의 특징 및 노동시장 성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15-18)

표 9. 비경제활동 사유의 연령대별 비율

(단위: %)

구직활동포기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19세	0.3	0.0	0.0	0.0	0.0	0.8	3.4	0.0	0.0
20~34세	12.1	11.0	3.4	15.9	9.9	16.4	13.3	20.0	14.3
35~55세	12.7	19.6	28.2	27.1	27.7	26.7	30.2	26.0	31.3
56~65세	32.6	30.3	29.4	20.5	24.9	22.8	22.9	24.2	23.5
65세 이상	42.4	39.2	39.1	36.4	37.5	33.3	30.2	29.9	3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근로의사없음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5~19세	0.3	0.5	0.7	0.6	0.7	0.2	0.3	0.5	0.7
20~34세	5.4	10.2	7.0	8.5	4.5	4.2	5.1	6.8	8.8
35~55세	9.3	19.7	14.0	12.5	10.4	10.4	8.9	11.9	10.0
56~65세	27.8	19.6	19.9	19.6	17.4	17.2	20.8	19.7	16.2
65세 이상	57.2	50.0	58.5	58.8	67.0	68.0	64.9	61.1	64.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이에는 동일한 취업준비의 사유가 65.1%였으나, 정규교육기관학업 및 진학준비의 이유가 26.5%로 매년 취업준비의 이유로 비경제활동 상태였던 응답자는 학교 진학 준비, 학업 등으로의 사유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을 회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줄

업유에 및 대학원 진학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 3) 주관적 인식변화

복지패널에서는 3년을 주기로 복지인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복지제도가

표 10. 취업준비자들의 비경제활동 사유 변화

(단위: %)

취업준비	군복무	학업, 진학준비	취업준비	가사	양육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없음	기타
2009년 → 2010년	0.0	17.5	33.6	14.2	0.0	11.0	23.7	0.0
2010년 → 2011년	0.0	14.4	70.0	0.0	0.0	4.2	11.4	0.0
2011년 → 2012년	0.0	26.5	65.1	0.0	0.0	0.0	8.3	0.0
2012년 → 2013년	0.8	15.5	64.0	0.0	4.3	0.0	13.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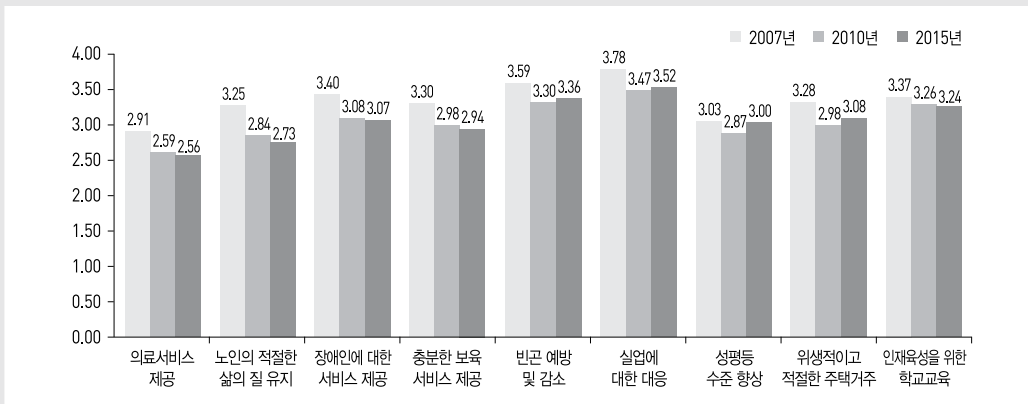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만들어지고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복지패널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9 가지 질문에 대해 조사대상자들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3점(보통이다)을 기준으로 빈

곤예방 및 감소, 실업에 대한 대응, 학교교육을 제외하고는 3점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로 나타나 많은 대상자가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다소 낮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기 보다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그림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변화

(단위: 점)



주: 1) 위 설문은 5점척도(매우잘하고 있다(=1), 잘하고 있는 편이다(=2), 보통·그저 그렇다(=3), 잘 못하는 편이다(=4), 매우 잘못하고 있다(=5)) 기준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정부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성별과 연령을 구분하여 보면, 평균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평가가 다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각각 2007년 3.75점, 3.30점, 2010년 3.04점, 3.00점, 2013년 3.08점, 3.04점이었다. 분야별로는 여성은 실업, 빈곤예방, 장애인, 인재육성이 평균보

다 높았으며, 남성은 실업, 빈곤예방, 학교교육, 장애인 등에 있어 좋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낮은 정책체감도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여성의 경우 의료서비스, 노인 삶의 질 유지 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남성은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삶의 질 유지, 성평등 수준 향상 등에서 정책에 대한

11) 김미곤 외(2014)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2014년기준), 67.1%의 국민이 복지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동일하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단지 19.0%의 전문가 만이 복지수준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김미곤 외(2014), 2014년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0, pp.143)

표 1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변화(성별)

(단위: 점)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의료서비스 제공	2.89	2.92	2.56	2.63	2.56	2.55
노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3.20	3.31	2.78	2.89	2.70	2.77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3.38	3.43	3.05	3.12	3.05	3.09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3.27	3.32	2.94	3.02	2.90	2.99
빈곤 예방 및 감소	3.55	3.63	3.23	3.38	3.35	3.38
실업에 대한 대응	3.74	3.82	3.43	3.52	3.47	3.57
성평등 수준 향상	3.06	3.00	2.86	2.87	3.04	2.96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	3.28	3.29	2.94	3.03	3.07	3.09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3.31	3.44	3.21	3.31	3.21	3.28
평균	3.30	3.35	3.00	3.09	3.04	3.08

주: 1) 위 설문은 5점척도(매우잘하고 있다(=1), 잘하고 있는 편이다(=2), 보통·그저 그렇다(=3), 잘 못하는 편이다(=4), 매우 잘못하고 있다(=5)) 기준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표 1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 변화(연령별)

(단위: 점)

구분	2007년				2010년				2013년			
	34세이하	35~55세	56~64세	65세+	34세이하	35~55세	56~64세	65세+	34세이하	35~55세	56~64세	65세+
의료서비스 제공	3.09	2.94	2.79	2.57	2.67	2.68	2.44	2.34	2.70	2.62	2.37	2.27
노인의 적절한 삶의 질 유지	3.46	3.31	3.06	2.87	2.94	2.92	2.69	2.56	2.96	2.79	2.48	2.35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3.73	3.46	3.16	2.86	3.39	3.15	2.92	2.73	3.35	3.10	2.89	2.65
충분한 보육서비스 제공	3.57	3.31	3.16	2.91	3.19	3.02	2.92	2.67	3.22	3.00	2.68	2.53
빈곤 예방 및 감소	3.75	3.63	3.50	3.24	3.42	3.36	3.26	3.04	3.59	3.42	3.19	2.96
실업에 대한 대응	3.72	3.83	3.78	3.66	3.53	3.54	3.39	3.27	3.66	3.57	3.47	3.17
성평등 수준 향상	3.24	3.07	2.74	2.84	3.07	2.92	2.70	2.64	3.21	3.05	2.79	2.67
위생·적절한 주택에서 거주	3.47	3.27	3.22	3.12	3.06	3.05	2.85	2.79	3.31	3.11	2.93	2.73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	3.57	3.36	3.30	3.18	3.40	3.34	3.06	3.02	3.40	3.32	3.09	2.86
평균	3.51	3.35	3.19	3.03	3.19	3.11	2.91	2.78	3.27	3.11	2.88	2.69

주: 1) 위 설문은 5점척도(매우잘하고 있다(=1), 잘하고 있는 편이다(=2), 보통·그저 그렇다(=3), 잘 못하는 편이다(=4), 매우 잘못하고 있다(=5)) 기준임.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의견이 높다는 것을 의미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각년도

만족도가 낮았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에 있어 연령이 낮아질수록 만족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변화에서도 34세 이하는 체감도가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반면에 56세 이상의 연령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별로 연령별로 보면 2007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에서 빈곤예방과 실업에 대한 대응의 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전연령대와 모든 시기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낮은 평가와 더불어 무엇보다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의료서비스 평가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다.

### 3. 나가며

지금까지 복지패널을 통해 9년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주거,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복지패널조사가 패널조사라는 점에서 가능한 동태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패널분석을 통해 주거, 노동시장 및 복지체감도에 대한 변화를 보면, 주거 빈곤 측면에서는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과 연령기준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이 증가하며, 월세거주자의 주거빈곤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저금리 현상, 전세 부족 등으로 인한 월세 수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저소득층과 주거불안계층을 위한 안정적 주거정책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외에 맞춤형 급여로서 주거급여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변화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한 번 시작된 노동시장 지위에 대한 변화는 높지 않았다. 즉 처음 상용직이 아닌 불안정 고용 상태에서 출발할 경우 안정적 지위로 상향조정되는 비율은 10.4% 수준으로 불안정 고용상태 근로자의 열명중 한명에 불과하였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노동시장 여건이 불리하였다. 비경제활동 사유변화를 보면 2005년에 비해 구직활동 포기, 근로의사 없음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시기 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확대해 왔음에도 국민들의 복지체감도 혹은 만족도는 높지 않았으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복지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구체화된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부문에서는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회이동성, 계층이동성이란 점에서 더 나은 여건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사회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 역시 높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최저임금 상향 조정,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 등)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지면상의 한계로 복지패널을 통한 다양한 종단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복지패널조사가 10년의 역사를 지나고 있으며, 많은 기초자료와 다양한 설문을 통해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사회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